설익은 흡연정책, 설 자리 잃어가는 흡연자 … 명확한 물리적 구분 통해 권리와 편리의 공존 모색해야

#.

흡연과 혐연 사이 논쟁은 여전한 현재진행형이다. 비흡연자는 흡연자의 담배 냄새가 불쾌하고, 흡연자는 비흡연자의 눈총이 따갑다. 간접흡연 피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와 마음 편히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편리는 모두 존중돼야 한다. 흡연에 있어 권리와 편리가 양립할 수는 없을까? 본 기사는 그동안 흡연을 둘러싼 학내 목소리와 이해관계 분석,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을 담았다.

▶1면에서 이어짐

우리학교의 움직임도 정부의 금연정책과 궤를 같이했다. 2011년 6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대학교 교사(校舍) 내 모든 공간은 금연구역이 됐고, 2013년 9월에는 서울캠퍼스(서울캠) 정문 앞 거리가 구성원 여론조사에서 약 80%의 찬성률을 보이며 금연 거리로 지정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서울캠 이과대학 서관 뒤와 정경대학 입구에 흡연구역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매년 학생회 입후보자들은 앞 다투어 흡연구역에 관련한 공약을 내걸고, 흡연은 시민교육의 단골 주제가 됐다.

문제는 흡연권의 '제한'이 그 자체만을 우선시하여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합리적 대안 마련에 대한 고민 없이,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못하는 동안 갈등은 빈번해졌다.

학내 커뮤니티에서도 흡연에 대한 논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소셜미디어에서 학내 커뮤니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게시글을 '흡연', '금연', '담배'라는 키워드로 분석한 결과 구성원이 지적하는 학내 흡연구역 문제는 다양했다. 건물 입구에서의 흡연부터 길을 걸으며 담배를 태우는 흡연자, 법으로 흡연이 금지된 건물 내 화장실이나 동아리방, 연구실, 기숙사 등에서의 흡연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최근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청운관 앞 벤치에서의 흡연 문제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시글 수는 '경희대학교 대나무숲'이 생겨난 2014년에 30개로 시작해, 이듬해 24개로 소폭 하락했지만, 각 게시글의 평균 '공감(좋아요)' 수는 2014년 33.1개에서 2015년 52개로 오히려 큰 상승폭을 보였다. 2016년 9월 현재까지 학내흡연 문제와 관련한 게시글은 79개로 총 2,920개의 공감을 받고 있다.

합리적인 대안 고민없고 흡연구역 구분도 모호

지난 9월 5일부터 7일까지 우리 신문이 시행한 '교내간접흡연 피해 정도와 흡연구역 이용 현황'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총 824명의 학내 구성원이 응답한 이번 설문에서 '교내 흡연구역 설치 시 가장 우선시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라는 응답이 75.2%로 가장 많았다. 청결 상태(10%), 접근성(6.9%), 분위기나 시설 등의 편리성(5.7%) 등에 비해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해당 설문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교내간접흡연을 둘러싼 문제 인식에 있어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음이 발견된다. 먼저 지난 2013년 9월(20.3%)에 비해 3.4%p 감소한 흡연자(16.9%)는 간접흡연 문제에 비교적 둔감한 모습을 보였다. 흡연자 중 89.9%가 '교내 흡연구역을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음에도, 흡연구역의 만족도를 묻는 설문에는 부정적 응답(불만족스럽다(32%), 아주 불만족스럽다(20.8%))이 52.8%를 차지한 반면 '교내에서 흡연권이 잘 보장되고 있다'고 응답한 흡연자도 50.3%에 달해 해당 문제에 대해 갈등양상이 표면화되는 경향은 관측되지 않았다. 그러나 비흡연자의 경우는 달랐다. 흡연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 중 '교내에서 혐연권이 잘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83.7%가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것이다.

구성원은 대체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대적인 보장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앞서 '교내 흡연구역 설치 시 가장 우선시해야 할 사항'을 묻는 설문을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구분해 분석하면 인식 차이는 명확해진다. 모집단을 흡연자로만 한정 지을 경우,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라고 응답한 비율은 41%로 뚝 떨어진다. 반면 모집단을 비흡연자로 설정할 경우, 이 수치는 82.2%로 상승한다. 실제로 비흡연자가 느끼는 간접흡연 피해 체감정도는 높은 편인데, 비흡연자 중 간접흡연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94.2%였으며 간접흡연 피해 정도는 심각하다(39%), 보통이다(28.3%), 아주 심각하다(26.1%) 순으로 응답됐다.

흡연구역 설치에서 중요한 것 간접흡연피해 최소화 75%

간접흡연 피해를 둘러싼 학내 구성원의 불만은 꾸준하지만, 아직도 문제 해결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대학본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흡연을 둘러싼 담론에는 소극적인 태도다. 현행법은 교사(校舍) 내 흡연만을 금지할 뿐, 건물 외부에서의 흡연을 명시적으로 제재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우리 신문이 수차례 취재할 때마다 돌아오는 답변이 이를 방증한다. "흡연구역을 정할 법적 근거와 정부 시책이 없는 상황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어 의견 조율이 어렵다." 이러한 대학본부의 입장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단 임의로 민원을 처리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대표적 사례가 청운관과 정경대학이다.

먼저 청운관은 유동인구가 많은 통행로에 흡연구역이 설치돼 문제가 불거졌다. 건물 남쪽에 기존 흡연구역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주변 강의실과 경희여자 중·고등학교로 담배 냄새가 올라온다는 민원이 제기돼, 현재 청운관 앞 벤치로 흡연구역이 변경됐다. 하지만 간접흡연 피해자가 건물 이용자에서 보행자로 바뀔 뿐, 또 다른 간접흡연 피해가 반복되는 미봉책으로 남았다.

정경대학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경영대학 생활협동조합 주변과 3층 주출입구 앞 흡연구역이 사라지면서, 일부 경영대학 흡연자가 정경대학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흡연자를 위한 별도의 흡연구역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폐쇄한 탓이다. 경영대학 1층에 흡연구역이 마련돼 있지만, 접근성이 떨어질뿐더러 관련 시설이라곤 재떨이용 화분이 전부다. 정경대학 흡연구역도 바닥에 그은 선으로만 분리돼 있고, 일부는 쓰레기통만 비치된 개방된 공간이어서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기존의 흡연구역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동안, 금연 안내 문구가 붙은 장소에서 흡연하는 모습도 왕왕 포착된다.

청운관 앞 흡연구역 흡연피해자 양성

한편, 국제캠퍼스(국제캠)는 비교적 큰 캠퍼스 면적으로 단위면적당 인구 밀집도가 낮아 흡연구역 마련이 용이했다. 지난 5월 우리 신문이 흡연구역과 관련된 학생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국제캠 관리팀에 전달한 결과, 멀티미디어관에서 글로벌관으로 이어지는 계단흡연구역이 글로벌관 왼쪽으로, 남자 기숙사 앞 흡연구역은 기숙사 뒤쪽으로 옮겨졌다. 멀티미디어관 앞 벤치는 금연구역이 되고 100m 정도 떨어진 곳이 흡연구역으로 바뀌었다. 비록 간접흡연 피해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흡연구역을 비교적 유동인구가 적은 곳으로 옮기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의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각 건물이 가까이 밀집돼있는 서울캠은 별도의 흡연구역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쓰레기통이나 재떨이, 자판기 주변이 암묵적 흡연구역이 됐다.

대학본부도 흡연을 둘러싼 구성원의 불만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9월 서울캠 총무팀은 본관 외 19곳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각 단과대학에 공문을 보냈지만, 구성원 간 이해관계 충돌로 무산됐다. 흡연구역 위치를 조정하면 비흡연자 사이에서 '내가 속한 지역은 안 된다'는 님비현상이 발생하고, 흡연구역을 없애자니 흡연자의 반발이 거센 것이 이유다. 이에 대해 총무팀은 "구성원 간 이해관계 조율이 어려워 정답을 찾기 힘든 상태"라며 "현재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중단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향후 구상하고 있는 해결책에 대해서는 "총무팀과 관리팀 차원에서 시설을 검토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구성원 간 이해관계에서 대학본부가 헤매는 동안, 흡연과 관련한 뚜렷한 정책적 성과물은 나오지 않고 있다.

> 흡연부스는 최선의 대안으로 꼽히지만 대학본부는 상업적 광고지양 목적으로 난색 표하고 있어… 하지만 갈등 완화 차원에서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 필요해

학내 흡연 문제, 해결 방안은?

흡연을 둘러싼 문제의 해결책은 없을까. 해결책에 앞서 어느 것이 올바른지 애매한 상황에서 자주 언급되는 '회색 지대'라는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회색 지대란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중간지대를 뜻하는 용어다. 흡연에 있어 회색 지대는 금연구역도 흡연구역도 아닌 곳을 지칭한다. 가령 학내에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그 이외의 모든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자유로운 흡연이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구성원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적절한 흡연구역?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물리적으로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은 딱히 없지만, 구성원의 의견 속에서 그 개요를 추출해볼 수 있다. 가령 ①간접흡연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장소는 금연을 우선한다. ②흡연구역 지정 시 흡연자의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흡연구역은 밀폐되지 않은 형태를 우선한다. ④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하다면, 밀폐된 공간을 대안으로 고려한다. ⑤흡연구역은 적정 인원을 수용 가능한 청결한 공간이어야 하며, 각 건물 실정에 맞게 설정되어야 한다. ⑥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없으면, 상위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흡연권을 제한한다. ⑦논의 후에는 교칙으로 명문화한다. 등이다.

먼저 앞선 설문조사에서 '학내 구성원이 생각하는 적절한 흡연구역 설치 장소'와 '현재 운영 중인 흡연구역 중에서 폐쇄하거나 옮겨질 필요가 있는 장소'에 대한 주관식 답변을 어휘 빈도 분석해본 결과, 비흡연자는 적절한 흡연구역 설치 장소로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174회)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①따라서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통행로, 출입구 근처는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동 문항에서 흡연자는 '적절한 흡연장소'를 언급하며 ▲각각-(25회) 이라는 관형사와 ▲건물(30회), ▲단과대(16회) 같은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 즉, 흡연자는 접근편의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것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②흡연구역을 지나치게 외진 곳에 정하거나 그 수가 부족하여 흡연자의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이유다.

이제 흡연구역 형태를 보자. 흡연구역의 형태는 밀폐 정도에 따라 크게 흡연 부스, 파티션(주변을 담장 등으로 가린 반 개방된 공간), 완전히 개방된 공간으로 분류된다. 그 설치비용은 개방된 공간일수록 저렴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이다. 그런데 '선호하는 흡연구역 형태'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의 의견이 갈렸다. '교내 흡연구역은 어떠한 형태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비흡연자는 '흡연 부스'를 선택(66.8%)한 인원이 가장 많은 반면, 흡연자는 '파티션'을 선택(37.4%)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흡연자 중 '흡연 부스'를 선택한 비율은 28.8%, '완전히 개방된 공간'을 선택한 비율은 28%였다. 흡연 구역 형태는 흡연자의 이용 행태가 반영되어야 함을 고려해볼 때, ③흡연구역 지정 시 간접흡연 피해가 없거나 미미하다면 비용이 적게 들고 흡연자가 선호하는 밀폐되지 않은 형태를 우선해야 하는 것이다.

적절한 흡연구역 형태? 흡연부스 VS 파티션

〈비흡연자〉 〈흡연자〉

물론, ④청운관, 정경대학과 같은 한정된 공간이면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옥상, 밀폐된 실내 흡연실, 실외 흡연 부스가 대안으로 제시된다. 옥상은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개방하지 않는 경우가 잦다. 건물 내 흡연실은 2010년 2학기까지 청운관 7층에 위치했던 흡연실과 같은 형태를 되살리는 것인데, 사실상 흡연 부스를 건물 내에 설치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 지점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은 바로 이 흡연 부스다. 흡연 부스는 의자, 재떨이 등의 편의시설과 공기정화 시설을 갖춘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다. 이 흡연 부스는 간접흡연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면서 흡연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종종 지목되어 왔으나, 그 실질적인 도입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대학본부는 흡연 부스 설치와 관련해 시설의 효용성과 비용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한다. 일부 대학들이 캠퍼스 내에 흡연 부스를 설치하고 있지만 정작 흡연자가 잘 이용하지 않고, 부스 한 대의 가격도 3,000만 원에 달해 자칫하면 교비가 낭비돼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흡연자인 회계세무학과 박 모 군은 "이전에 흡연 부스를 이용해본 적이 있지만 깨끗하지 못한 시설과 답답함 때문에 흡연 부스를 꺼리게 된다"면서 "환기가 안 될 경우 옷에 담배 냄새가 배어 강의실에 들어가면 옆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2차 피해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흡연 부스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흡연 부스 업체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업체 대표는 대학본부가 표하는 효용성과 비용 우려에 대해 "모두 해결 가능한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흡연자가 흡연 부스 이용을 꺼리는 이유는 열악한 시설과 밀폐된 공간으로 인해 옷에 담배 냄새가 배기 때문인데, 흡연 부스 내 제연기를 설치하고 일정 주기마다 필터를 교체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현재 인천국제공항에는 10곳의 흡연실이 마련돼 있으며, 공기정화 시설 강화로 이용객의 쾌적한 흡연공간을 보장한다고 평가받는다. 중앙대는 야외 흡연구역 11곳을 지정했으며, 한국담배소비자협회에서 기증받은 6,000만 원 상당의 흡연 부스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중앙대 이외에도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한양대 등의 대학이 현재 흡연 부스를 설치한 상태다. 이에 따르면 흡연 부스는 ⑤청결한 대안 공간이 되는 셈이다.

흡연 부스 설치비용에 대해 업체 대표는 "흡연 부스 옥외 광고와 음료수 자판기설치를 조건으로, 흡연 부스 설치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업체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학교에서 부지만 제공하면 3,000만 원에 달하는 흡연 부스를 무상 설치하고, 필터 교체와 하루 2회 청소 비용, 전기료, 부스 내 CCTV와 냉난방 설비도 지원한다는 것이다.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많은 흡연 부스 업체가 광고와 자판기 설치를 조건으로 흡연 부스 설치 비용을 전액 혹은 일부 부담하는 추세다. 하지만 대학본부는 업체가 내건 전제 조건에 난색을 보인다. 서울캠 총무팀은 "외부 흡연 부스 업체에서 교육성이 아닌 상업성 광고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학내에 상업적 광고를 지양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한 흡연 부스 설치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청운관 1층 심장제세동기(AED)에는 기기보다 큰 상업적 광고판이 버젓이 설치돼있으며, 전면플라자 개관 당시에도 상업성을 위한 공간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학이 상업성 광고를 지양하고 있다는 주장에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고가의 흡연부스 설치 유연한 정책대응으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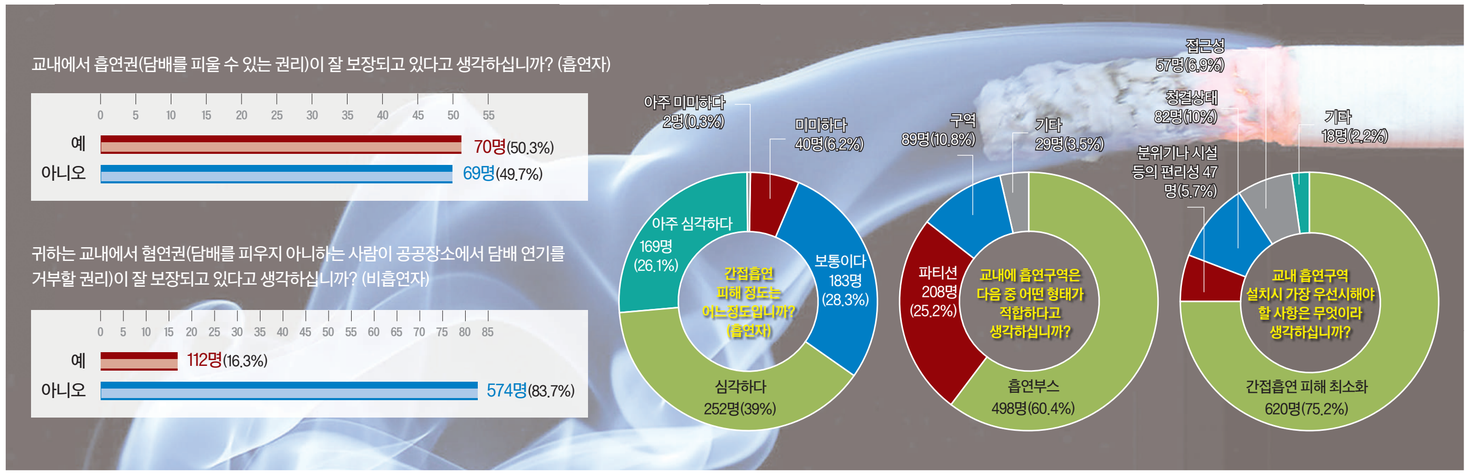
흡연 부스도 분명 한계는 존재한다.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또 다른 갈등을 부르는 혐오시설로 전락할 수 있으며, 쉬는 시간에 흡연자가 몰릴 수밖에 없는 대학 캠퍼스 특성상 수용인원이 적다는 한계가 있다. 흡연 부스에 관한 여러 갑론을박이 오가지만, 현재까지 흡연 부스는 국내 도입된 여러 흡연구역 형태 중 가장 최선의 대안인 실정이다.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한정된 공간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물리적으로 분리되기 때문이다.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구성원 간 갈등 완화 측면에서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⑥모든 대안이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는 상위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공공복리를 위하여 흡연권을 제한하여야 한다. 단, 흡연권 제한 시 다양한 정책적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현재 우리 학교는 건강센터에서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를 제공하는 정도다. 타 대학 사례를 살펴보면, 금연장학금 지급이나 금연캠페인을 통해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는 대학들도 있다. 삼육대, 건양대, 목원대, 호서대 등은 금연을 성공한 학생에게 금연장학금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금연클리닉 운영 등 타 대학의 흡연 관련 정책은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⑦모든 논의 후에는 교칙으로 명문화하여 학내 구성원에게 정확한 안내와 홍보를 진행하고, 이를 어기면 학교 차원에서의 단속과 제재가 병행돼야 한다. 논의 방식은 대학본부와 총학생회 등 여러 학내 구성원이 참여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구성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 형태가 가장 좋다. 총투표와 같은 의사결정 과정으로 각 건물 실정에 맞는 흡연구역을 확보하고, 이용수칙을 정해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매년 반복되는 담배를 둘러싼 갈등. 건전한 토의로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쾌적한 흡연공간이 마련돼, 혐연권과 흡연권이 모두 존중받는 학내 흡연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본다.

우리신문은 지난 9월 5일부터 7일까지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담배와 관련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총 824명이 응답한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 정도와 흡연구역 지정에 있어 구성원의 생각을 공론화하고자 한다.



'적절한 흡연구역 설치 장소'와 '폐쇄하거나 옮겨질 필요가 있는 장소'는?

〈단위 : 어휘 빈도 횟수〉

비흡연자(686명)

서울캠	적절		부적절
청운관	102회	<	200회
벤치	14회	<	95회
경영대학	17회	<	80회
정경대학	17회	<	39회
문 · 이과대학	22회	<	38회
호텔관광대학	7회	<	14회
중앙도서관	24회	>	22회
생활과학대학	16회	>	13회
전면플라자	8회	>	1회
네오르네상스관	7회	>	4회
운동장	7회	>	3회
본관	7회	>	2회

국제캠	적절		부적절
멀티미디어관	42회	<	92회
외국어대학	15회	<	62회
우정원	23회	<	29회
공과대학	14회	<	28회
벤치	9회	<	25회
학생회관	9회	<	16회
전자정보대학	9회	<	14회
기숙사	10회	<	13회
중앙도서관	10회	>	1회

흡연자(139명)

서울캠	적절		부적절
청운관	18회	<	34회
벤치	9회	<	11회
문 · 이과대학	12회	>	3회
중앙도서관	9회	>	2회

국제캠	적절		부적절
전자정보대학	1회	<	14회
멀티미디어관	17회	>	8회
벤치	9회	>	0회
외국어대학	7회	>	4회
우정원	6회	>	1회

* 각 횟수는 주관식 답변 어휘 빈도 분석 결과에 따른 단어 언급 횟수입니다. 해당 설문 중 표본이 작은 장소는 부득이하게 제외하였습니다.